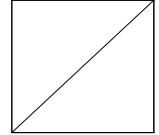


공개



의안번호	제 3 호	의 결 사 항
심 의 연 월 일	2026. 6. 24. (제 10 회)	

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(안)

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

제 출 자	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	배 경 훈
제출 연월일	2026. 6. 24.	

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(안) [요약]

I. 의결주문

- 「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II. 제안이유

- PBS 폐지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 완성도·체감도 제고를 위해 PBS 폐지의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PBS 폐지 이행방안 고도화

III. 주요 내용

□ PBS 폐지 추진현황

- (PBS 폐지 결정) 'PBS 단계적 개편' 국정과제 확정('25.9.16, 국무회의)
- (추진계획 수립) 「과학기술분야 출연(연) 정책방향」('25.12.18)에 따라 '임무·성과 중심 국가거점 재도약'을 위한 PBS 폐지 추진계획 수립
 - '수탁사업 종료재원(年 4000억 규모)을 출연금으로 전환, 정부·기업 수요 기반 연구를 기획·수행하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원

□ 현장반응 및 쟁점

- (현장반응) PBS 폐지방침을 환영하면서도 Post-PBS의 현장 정착을 위해 과도기 단계에서의 구체적 방향과 전략 수립을 요구

- (전략연구사업) 임무 중심 연구체계 정착을 위해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며, 현장의 공감대에 기반한 기관별 임무 정립 병행 필요
- (신규수탁) PBS 폐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수탁이 지속되어, 신규수탁 허용여부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
- (안정적 인건비) 기관출연금 내 인건비가 이원화되어 있어, 안정적 인건비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구조 개선 필요

※ 공공·유관기관 업무보고('26.4.17) 중 대통령 말씀 : “정부 재정으로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잘 살려야 함”

□ PBS 폐지 이행 고도화방안

○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안정적 지원 강화

- (인건비-과제비 분리)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 지원^{'26~}, 기관출연금 내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기관운영비로 일원화^{'27~}

현행 기관출연금('26)						기관출연금 보완('27~)					
기관운영비		기본연구사업		전략연구사업		기관운영비		기본연구사업		전략연구사업	
인 건 비	경 상 비	과제	과제	과제		인 건 비	경 상 비	과제	과제	과제	
		사 업 비	사 업 비	인 건 비	직 접 비			간 접 비	사 업 비	사 업 비	직 접 비

- (신규수탁 제한)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 제한^{'27~}하되, 사업 목적 달성에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 허용(인건비 미계상)^{'27~}
 ※ 신규수탁 예외적 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·배포('26.下)
- (인센티브체계 개편)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체계로 개편 추진^{'26.下}
 ※ 연구수당(인건비의 20%), 연구개발능력성과급(간접비의 10%) → 성과 연동 체계로 전환

○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

- (전략성 강화)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출연연 임무 및 수행전략 수립, R&D 포트폴리오(5년) 수립 및 R&D 재구조화(기본연구-전략연구-수탁)와 연계
- (과제관리체계 구축) 국가전략연구사업의 임무(수요) 기반 기획절차를 고도화하고, 평가·성과관리 등을 포함한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

○ 제도적·행정적 기반 조성

- (법령 정비) Post-PBS 정착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 추진^{'26}
- (책임성 강화) 연구회의 역할·중요성 확대에 따른 쇄신 노력 강화, 반복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청렴인식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^{'26~}
- (연구행정 역량 강화) 기관별 공동행정 기능을 연구회 중심으로 전문화하여,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행정전문성 강화^{'26~}

□ 향후 계획 : '27년도 기관운영비 정부예산안 확정(~'26.8월)

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6 - 6 (3호)

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(안)

2026. 6. 24.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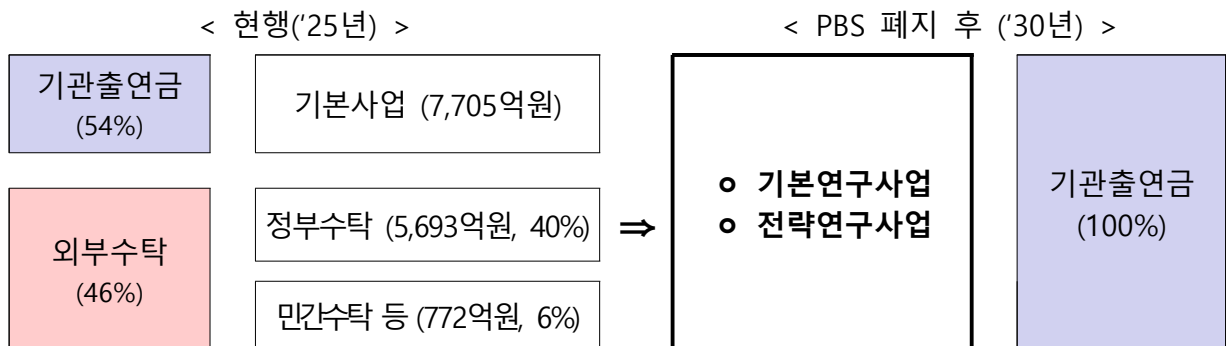
I . PBS 폐지 추진현황	1
II . 현장반응 및 쟁점	2
III . PBS 폐지 이행 고도화방안	3
전략1.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안정적 지원 강화 ...	3
전략2.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중심 연구체계 고도화 ..	4
전략3. 제도적 · 행정적 기반 조성	5
IV . 향후 추진계획	6
[참고자료]	
1. 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 [보완]	7

I. PBS 폐지 추진현황

□ 국정과제에 따라 PBS 폐지 결정, 상세계획 수립 후 본격 추진

- (PBS 폐지 결정) 'PBS 단계적 개편' 국정과제 확정('25.9.16, 국무회의)
- (정책방향 설정) 「과학기술분야 출연(연) 정책방향」('25.12.18)에 따라 출연연 정책방향을 '임무·성과 중심 국가거점 재도약'으로 설정
 - PBS 폐지 상세 추진계획 수립 후 본격 추진 중
- (추진현황) '수탁사업 종료재원(年 4000억 규모)을 출연금으로 전환, 정부·기업 수요 기반 연구를 기획·수행하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원
 - (일정) 대규모·장기 연구과제를 고려하여 5년간 단계적 개편
 - (전략연구사업) 전략연구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, 정부·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적으로 기획·수행하는 운영체계 구축
 - (기관출연금) 기관 자체 수요에 따른 '기본연구사업'과 정부·기업 수요 기반으로 운영하는 '전략연구사업'으로 유형화, 균형있게 지원
 - (인건비)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(수탁)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되, 인건비 운영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연구사업에서 인건비 계상

[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(정규직) 수입구조 변화]



※ 본 그림은 전체 23개 출연(연)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념도이며, 개별 기관별 비중은 상이

☞ 정책 완성도·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 및 계획 고도화 필요

Ⅱ. 현장반응 및 쟁점

□ **현장은 PBS 폐지방침을 환영하면서도 Post-PBS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도기 단계에서의 구체적 방향과 전략 수립을 요구**

○ (전략연구사업) '26년 신규과제는 촉박한 일정 등으로 임무 부여 및 기획 절차 마련 전 착수되어, 조속히 기획·조정·관리체계 마련이 요구

☞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무 중심 연구체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급

○ (신규수탁) PBS 폐지의 과도기에 신규수탁 허용여부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각자 상이한 기관의 자율에 맡겨 정부수탁 지속

☞ 수탁과제-전략연구사업 간 명확한 목적·역할 구분을 바탕으로 신규수탁 허용여부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

○ (안정적 인건비) 기관출연금 내 인건비가 기관운영비,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되어 현장에서는 전략연구사업을 또다른 PBS 형태로 인식

※ 공공·유관기관 업무보고('26.4.17) 중 대통령 말씀 : “정부 재정으로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잘 살려야 함”

☞ PBS 폐지의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인건비 재정 구조 개선 필요

○ (전략성 강화) 양자, 퍼지컬AI 등 핵심 기술분야에서 기관별 기능 중복, 전략성 부족 등 지적('26.1.12, 과기분야 출연연 업무보고)

☞ 출연연의 국가 임무 중심 연구기관으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현장의 공감대에 기반한 기관별 임무 정립 병행 필요

⇒ **연구현장 피드백,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책방향 고도화**

Ⅲ. PBS 폐지 이행 고도화방안

◆ PBS 폐지 이행 기본방향

- PBS 폐지는 연구 전념을 위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의 측면과 인건비 보장에 따라 국가 미션을 중점 수행한다는 2가지 의미를 가짐
- ☞ PBS 폐지의 2가지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고도화

①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안정적 지원 강화

- (대상기관 명확화)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출연연 및 연구 중심 직할연구기관 10개*를 PBS 폐지 대상으로 설정^{'26~}
 - * [과기정통부] 뇌연구원, 수리연구원, 원자력의학원, 동남권의학원, [우주청] 향우연, 천문연, [해수부] 해양과기원, 극지연, 선박연, [산업부] 세라믹연
- (인건비-과제비 분리)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 지원^{'26~}, 기관출연금 내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기관운영비로 일원화^{'27~}

현행 기관출연금('26)						기관출연금 보완('27~)					
기관운영비		기본연구사업		전략연구사업		기관운영비		기본연구사업		전략연구사업	
인건비	경상비	과제	과제	과제	과제	인건비	경상비	과제	과제	과제	과제
		사업비	사업비					사업비	사업비		

- (신규수탁 제한)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^{'27~} 하되,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한하여 예외적 허용^{'27~}
 - 신규수탁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·배포^{'26.下}

<p>▶ 예외적 허용 사업 예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 출연연의 역할(연구 인프라 포함)이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업 - 산·학·연 협력을 전제로 출연연 연구성과의 사업화·실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- 국가 간 협정 체결 등에 따라 출연연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국제협력 사업 <p>▶ 예외적으로도 허용 불가능한 사업 예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사업 목적 달성에 출연연의 역할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 - 여타 산·학에 비해 출연연의 차별성을 두지 않는 사업 - 일정 규모 이하의 단기·소액 사업을 과다하게 수주하는 경우
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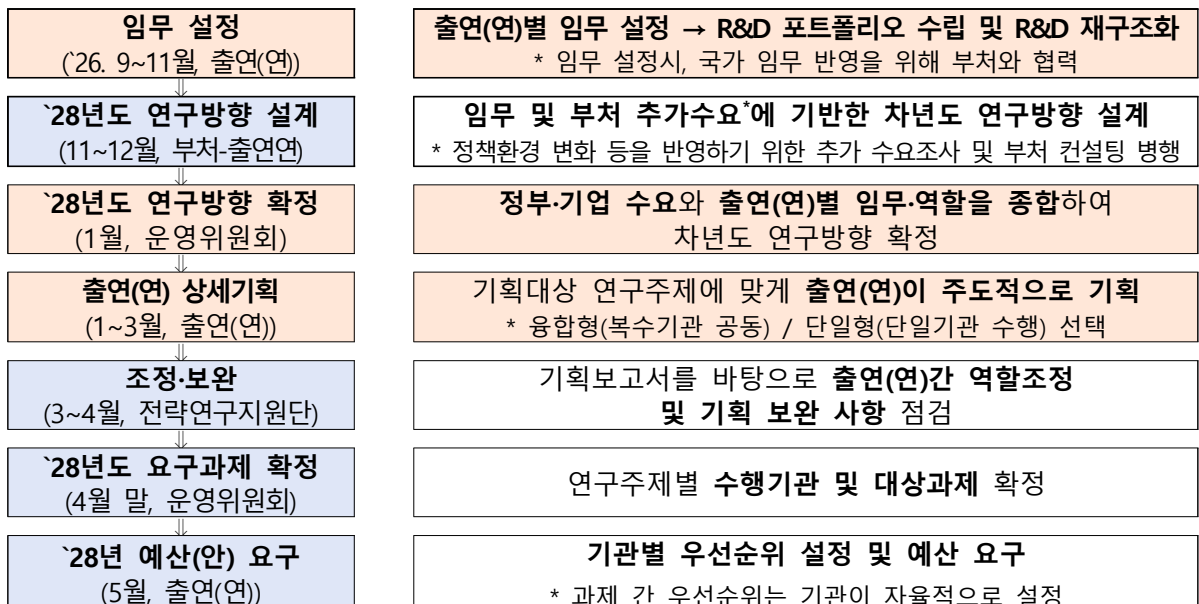
-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출연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신규 R&D사업은 정부수탁보다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우선 편성*^{'27~}

* 긴급한 수요(예 : 소부장 사태 등)로 인해 국가임무를 기관에 부여해야 하는 경우 정책지정으로 편성

- (신규수탁 인건비 계상 제한) ① 예외적으로 허용된 정부수탁과제와 ② 민간수탁과제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미계상^{27~}
- (인센티브체계 개편) 개개인의 인건비 및 수탁과제 규모에 연동되는 현행 인센티브 체계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체제로 개편 추진^{26.下}
 - ※ 연구수당(인건비의 20%), 연구개발능률성과급(간접비의 10%) → 성과 연동 체계로 전환
 -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및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한 출연연의 전반적인 처우수준 개선도 검토

②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

- (전략성 강화)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출연연의 국가적 임무수행 전략을 주기적으로 마련^{26~}
 - 출연연별 고유·국가 임무를 반영한 R&D 포트폴리오(5년) 수립, 출연연 R&D(기본연구 - 전략연구 - 수탁) 재구조화와 연계
 - 국가전략기술 등 대규모·융합형 연구분야는 공동 목표 설정 및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
- (과제관리체계 구축) 국가전략연구사업의 임무(수요) 기반 기획절차를 고도화하고, 평가·성과관리 등을 포함한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
 - (기획 완성도 제고) 기관별 임무에 기반하여 부처 컨설팅 등을 통해 차년도 연구주제 및 방향을 설계하고, 충분한 기획시간 확보^{27~}



- (평가·관리체계 수립) 전략연구사업의 정체성·방향성에 부합하는 임무중심 평가·관리체계* 수립 및 규정(안)** 마련^{~'26.말}
 - * 과기정통부 및 수요부처, 연구회, 각 연구기관의 역할·책임, 협약 체결·변경, 장비 도입, 연구비 집행, 단계·최종평가 절차, 연구계획 변경 절차 등
 - ** 첫 단계평가('27)를 시작으로 평가·관리 데이터를 누적하여 평가·관리체계를 보완하고 '전략연구사업 운영규정'으로 명문화(~'28)
- (성과 환류) '26년에 기개편된 年 단위 기관평가와 사업 점검·평가를 통해 국가임무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검토 및 인센티브 연계^{27~}
- (재정운영 유연화) 기관 단위 임무 수행에 필요한 효율적 자원 운용을 위해 편성, 집행,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 환류 등 재정운영방식의 유연화 검토^{26.下}
 - ※ (편성) 총액배분 자율편성 / (집행) 기술변화 등에 따라 유연한 예산·과제목표 등 조정

③ 제도적·행정적 기반 조성

- (법령 정비) Post-PBS 정착,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자율성 원칙 명시, 제정('04) 이후 환경변화 반영 등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 추진²⁶
- (연구회 혁신) 연구회의 역할 및 중요성 확대에 따른 기관장 대외적 책임성 강화, 거버넌스 개편, 성과 홍보 등 쇄신 노력 강화^{26~}
- (연구행정 역량 강화) 기관별 공통행정 기능을 연구회 중심으로 전문화하여,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및 행정전문성 강화^{26~}
 - * 감사, 채용, 고충처리, 홍보 업무를 우선 전문화 추진('26)하고, 전산, 구매, 기술 사업화 등 전문화 범위 지속 확대 검토('26~)
- (윤리경영 확립)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청렴인식을 개선하고, 자정능력 제고, 제도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^{26~}

IV. 향후 추진계획

□ 추진과제 이행 ('26~)

- '27년도 기본연구사업 및 전략연구사업 정부예산안 확정 (~'26.8월)
- 인센티브체계 개편 추진 ('26.6월~)

□ 이행점검 및 고도화 ('26~)

-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계획 고도화

참고

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 (보완)

○ 당초 재정구조 (~'25)

기관출연금(기본사업)				정부수탁사업									민간수탁 등
기관운영비		주요사업비		과제			과제			과제			
인건비	경상비	과제	과제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...
		사업비	사업비										

○ 기존 폐지 과정 ('26)

기본사업				정부수탁사업						민간수탁 등			
기관운영비		기본연구사업		과제			과제						
인건비	경상비	과제	과제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...
		사업비	사업비										

○ 폐지 과정 보완 ('27~)

기본사업				정부수탁사업						민간수탁 등		
기관운영비		기본연구사업		과제			과제					
인건비	경상비	과제	과제	직접비	간접비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...
		사업비	사업비									

○ 폐지 후 (최장 '30년까지)

기본사업				정부수탁사업						민간수탁 등		
기관운영비		기본연구사업		과제			과제					
인건비	경상비	과제	과제	직접비	간접비	직접비	간접비	직접비	간접비	직접비	간접비	...
		사업비	사업비									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기관혁신정책과	
담당자	장정인 서기관
연락처	전 화 : 044-202-4751 E-mail : jeongin@korea.kr